

두 개의 가짜 '특별법'을 거부해야 진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두 개의 가짜 '특별법'과 한 개의 진짜 특별법

두 개의 가짜 '특별법'과 한 개의 진짜 특별법이 있다. 두 개 중 하나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이다. 새누리당 특별법은 범죄 수사 피의자인 정부와 정부의 은폐 조작에 공조하고 있는 공동정범 격인 새누리당이 다수로 참여하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대상이 수사의 주체로 둔갑한 격으로, 결국 새누리당 특별법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하려야 할 수 없는 무늬만 특별법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정하는 새누리당과는 달리 수사권은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누더기 가짜 특별법은 애초 국회 추천 12명과 피해자 단체 추천 3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특별법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특별법 내에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마치 해방 이후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일제 부역자들 다수가 들어갔던 것과 같은 황당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조사와 수사를 방해하고 몰타기 공작 등 폭력을 행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 양보안조차도 새누리당이 반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 안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유가족 추천 진상조사위원회에게는 아무런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가짜 특별법에 불과하다.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유가족 특별법의 내용을 제멋대로 변경하고 후퇴할 권한을 줬는가? 누가, 언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멋대로 특별법에 대한 독자적인 교섭권과 체결권을 행사하도록 권리를 위임한 적이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법을 가지고 장난질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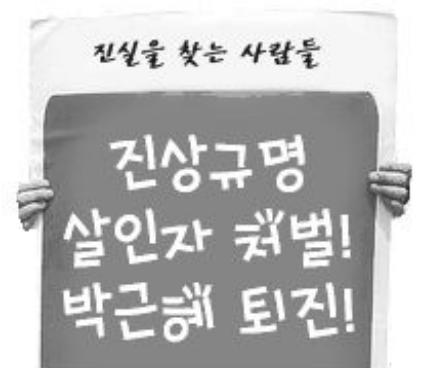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짜 특별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제출한 특별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지레 양보하고 후퇴해서 제출한 누더기 가짜 특별법은 분명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대책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특별법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는 여야에게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짜 특별법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교섭하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차악'인 새정치민주연합 특별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내심 생각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지지하며 서명에 동참한 3백만 이상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짜 누더기 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교섭하는 것 자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규탄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바란다.

만약 지금 가짜 특별법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야합해서 가짜 특별법안을 가지고 올 때, 대혼란과 분열이 생길 것은 뻔하다. 그리고 실제 이 안으로는 온전하게 진실을 파헤칠 수도, 학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무능한 정권인가 학살을 감추려는 극악무도한 정권인가

청와대는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요구받은 자료 중 단지 3%만을 제출했다. 정부는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해서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저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 가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는 우연한 안전사고일 뿐이며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개인회사 청해진 해운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숨기고 있는 저들은 이상하리 만치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무능론'과 '무책임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한 최후의 방어막이다.

“우연한 사고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지만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세월호 집회에서도 정부의 '무능론'과 '안전사회론'이 거의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으니 저들의 연막작전은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무능해서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았다. 해경은 선원만 구조하고 승객은 구조하지 않았다. 구조하지 않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민간 어선과 잠수사의 접근과 구조를 막았다. 다수의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에 달하는 승객을 수장시켜 버렸다.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구조를 기다리다 죽게 만든 책임은 선원들과 선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능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니라 대학살이다.

사태의 진실에 대해 접근할 때는 저들이 애써서 드러내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저들은 감추려 했지만 세월호 침몰이 대형여객선 해양 사고 중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된 것이 언론에 드러났다. 이는 국정원이 세월호 사건을 이미 그 이전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세월호 침몰은 왜 국정원에 보고되어야 했으며 보고를 받은 국정원은 무엇을 했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 16일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박근혜는 무엇을 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비서실장인 김기춘도 박근혜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가?

솔한 의혹이 있고 이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면 사태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껌테기만 남은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며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세월호 학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인정권이 말하는 위선적인 안전 사회를 거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권력의 학살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안전 사회를 위해서는 세월호 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세월호 학살의 책임자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원한다!

정부는 아이들을 왜 살리지 않고 죽였는가?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조작하고 있는가?
“세월호를 기억하자!”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정확한가?
진실의 기억인가?
저들에 의해 주입된 기억인가?
우리는 오로지 세월호의 진실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의 기억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병언의 죽음으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학살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동안 이 나라 정부와 보수 언론은 세월호 학살의 원인으로 '자본의 탐욕, 민영화, 규제 완화, 관피아, 학피아' 등을 언급하고 그 핵심 인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지목하며 그의 호화로운 생활, 종교 단체 심지어 연애 이까지 들쭉서 가며 유병언 몰아가기에 올인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바람대로 유병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는커녕,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의 알려지지 않았던 영상, 그날의 교신기록, SNS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권이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고 심지어 구조를 방해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며,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이 유병언을 자신들의 바람막이로 쓰려던 계획은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병언이라고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되었다. 검경합동수사팀이 한 달 넘게 유병언의 행방을 추적했는데 사체가 발견된 위치는 정작 유병언이 도주했다고 알려진 별장 근처였다는 점, 6월 12일 발견했다면서 이제야 유병언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 빠른 시간에 부패가 진

행되었다는 점, 사체와 주변 물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점, 또 부패가 진행될 정도의 시간 동안 사체에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체가 놓여 있던 풀의 상태가 주변의 풀과 똑같다는 점 등등, 그리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유병언의 죽음과 관련해서 구원파와 김기춘 실장과의 커넥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다. 이러한 수많은 의혹들로 인해, 심지어 그 사체가 유병언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있다. **세월호 학살의 핵심은 유병언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유병언의 죽음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이 박근혜 정권의 만행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있다. 유병언의 죽음보다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다. 유병언의 죽음으로 진실이 묻힐 수는 없는 법이다!

유병언의 죽음으로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학살이 가려지지 않는다! 세월호 학살 주범 박근혜를 몰아내자!!

'아버이 연합'과 '엄마 부대'

인면수심(人面獸心)이란 말이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말에 가장 걸맞은 단체들이 있으니 바로 '아버이 연합'과 '엄마부대 봉사단'이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아버이와 엄마의 탈을 쓴 악마 연합, 악마 부대이다.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연합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되는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이 백주 대낮에 펼쳐지고 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잃으면 평생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며 떠난 어린 자식이 생중계로 수장되고, 그리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거나 아직 시신도 거두지 못했으니 그들 유가족 가슴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이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커멓게 타 버린 가슴으로, 자식의 영정을 부여안고, 제발 잊지 말아 달라고,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 가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화답해, 진도 앞바다에서 죽어

간 영혼과 살아남았어도 상처투성이인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아버이'가 되고 '엄마'가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저들 악마 부대원들은 유가족들의 절규에 '듣기 좋은 노래도 세 번이면 듣기 싫은데 석 달 백 일을 끈다'며 매정하게 되받아치는가 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특권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는 기상천외한 발언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폭력을 넘어 단식 농성장을 침탈하고 서명 테이블을 건어치는 물리적 폭력도 불사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아버이'이며 '엄마'인가. 아이를 낳아 보고 길러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월호 학살 피해자들에게 차마 이런 언행을 일삼을 수는 없다.

다시 묻는다. '아버이 연합'과 '엄마부대 봉사단'은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누구의 주구(走狗)인지 정체를 밝히고 당장 '아버이'와 '엄마'의 이름을 떼어 버릴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요즘 극심한 ‘의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나 열애설이 터져 나오면 가장 먼저 이것이 다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이 아닌가하고 의심하게 되었을 정도이니까요. 이 모든 게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모든 언론은 분명히 ‘전원구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당연히 믿었습니다.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의심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부가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굶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최정에 잠수사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발표했을 때, 저희는 그것을 당연히 믿었습니다. 정부가 설마 국민을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10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들이 목격했던 것은 박근혜의 조문 연출과 정부의 은폐, 조작질이었으며, 그 하수인이었던 언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직스럽다’고 배워 왔던 정부는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100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진실이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가 배워 온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

말 말도 안 되는 ‘진상’들이 지난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보호한다던 정부는, 자신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말이나 지껄여 대면서 뒤에 숨어서는 진실을 감추고 조작하는 ‘컨트롤 타워’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경과 해군을 동원해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고 심지어는 잠수사들로부터 비밀을 지키라는 각서까지 받아 냈다고 합니다. 언론은 ‘기레기’라는 명칭이 말해 주는 것처럼,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섰고, 기성 정치인들은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들이 이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진실을 숨기려 하는 것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더 이상 저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들에 의해 정의와 양심, 진실이 유린당하고, 저희들의 친구와 가족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 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동함으로써 저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을 수 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권력을 비호하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야’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에 대해 초유의 일이며, 검사가 독점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요구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자!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고 심지어 구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학살한 끔찍한 전례가 있는가? 전례가 없는 학살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 운운하며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권력을 비호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민변에서 주장한 것처럼, 특별법은 현행 법률하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법으로, 검찰청 내의 검사에게

만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특별법은 합법적인 요구이지만 국회 내에서의 여·야의 논의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은 결코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살인 피의자인 국가를 수사하고 조사 대상, 처벌 대상에 올려놓는 비상조치법이다. 박근혜를 비롯해 김기춘 등 청와대 실세, 남재준 전 국정원장, 검찰과 경찰, 해경, 재벌언론 등 세월호 학살 범주에 직·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권력자와 권력기구 모두를 성역 없이 조사하고 죄가 드러나면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민중들이 격렬하게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입법이다.

이런 점에서 저들이 내세우는 특별법은 학살자들을 비호하고 살인 범죄를 은폐하는 음모를 담고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에 맞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투쟁으로, 온전한 ‘진상규명’, ‘학살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진정한 특별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